

한중 인문유대 담론과 방향에 관한 고찰*

장호준**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인문유대 강화 제안과 합의 배경
3. '인문'과 '유대'에 관한 다른 입장
 - 1) 인문유대와 인문공동체의 거리
 - 2) 인문 개념의 다중성
4. 중국의 인문외교와 한중 인문유대
 - 1) 새로운 국제관계 담론으로서의 인문외교
 - 2) 중국의 인문외교 전략과 한중 인문유대
5. 맺는 글 :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을 위한 제언

1. 시작하는 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중 관계는 경제, 군사안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경제 분야에서 보다 두드러지는데, 1992년 63.7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014년 2,345억 달러로 약 37배나 증가하였다. 한국의 무역 및 투자 구조도 급속히 변화하여 2009년부터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가 대미, 대일 수출규모의 합을 초과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한국인 직접투자(FDI) 규모 역시 조만간 대미 투자규모를 추월할 태세이다. 양국 관계의 저변을 보여주는 인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2년 13만 명에 불과하던 양국 방문자 숫자는 2014년에 약 1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2013년 상반기부터는 한국을 찾는 최대 외국인이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바뀌었다.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역시 꾸준히 강화되어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2014년까지 양국 간에 37회의 정상회담, 26회의 정상급 회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9-362-A0000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hihojun@gmail.com)

109회의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¹⁾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제1교역, 수출, 수입 대상국이며 중국인이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이 된 오늘날, 한중 관계는 교류의 양적 확대라는 틀을 넘어 관계의 질적 발전을 모색해야만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중 교류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던 2000년대 초반 이래 10여 년 간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낮아진 점에서 볼 수 있듯이²⁾, 교류의 양적 증가나 공식적인 관계 격상이 반드시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은 중국과 비동맹국 간의 외교관계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각 분야에서 대중국 교류가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편중 외교, 북한 핵문제 해법에 관한 중국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³⁾이 일반적이다(이성일 2011, 충성의 2012).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 발표한 ‘한중 인문유대(人文紐帶)’ 강화 사업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3년 6월 박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을 채택하여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세 가지 중점 추진 분야의 하나로 ‘인문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문유대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①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② FTA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며, ③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킴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고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

오랜 역사 기간에 걸쳐 폭넓은 문화적 공감대가 축적된 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인문’을 외교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동안 경제교류 확대와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다뤄왔던 기존의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인문교류 활성화를 주된 협력사안으로 설정하고 “인문유대 강화”라는 보다 특수한 형태의 목표를 천명한 것

1) 외교부 홈페이지 ‘지역별 이슈’(동북아) 참고 <http://goo.gl/UEeoWC> (최종검색일: 2015년 5월 23일 최종 열람). 이 글에서 참고, 인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2015년 5월 23일에 최종 열람하여 확인했으며, 주소가 긴 경우에는 지면 절약을 위해 구글(google) 단축 주소를 사용하였다.

2) 연합뉴스 기사 <http://goo.gl/TRCMFP>; Pew Research Center 데이터베이스 <http://goo.gl/XnVxti>

3)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 관계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동아일보 기사(<http://goo.gl/c8nBof>)와 한겨레신문 기사(<http://goo.gl/S7oq6D>)를 참조할 것.

4)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2013.06.27.), 『2013 대한민국 외교연표』, pp.145-174(부속서 포함)

은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 넘는 상당히 신선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양국 언론의 보도 논조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⁵⁾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가치 있는 평론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오고 있다.

인문유대 강화 합의가 발표된 직후 『성균차이나브리프』는 특집호(2013)를 통해 이 합의의 전략적 가치와 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위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⁶⁾, 박재우(2013), 심정창(沈定昌 2014), 장호준(2013)도 이 사업이 한중 관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문유대 강화 선언의 의의를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찰한 연구들도 생산되었다. 장즈창(張志强 2013)은 이를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기제로 삼아 인식론적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싱리취(邢麗菊 2014)는 한중 관계의 역사성과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인문유대 사업을 한중 ‘인문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인갑(田寅甲 2013)은 최근 중국이 강대국으로 굴기(崛起)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중국적 표준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문공동체 건립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문유대 강화 합의의 적실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출판되고 있는데, 인문교류의 중요성을 공공외교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한중 도시간 교류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수한(2013)의 연구,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사업 경과와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인문유대 사업의 제도화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희옥(2015)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최근 동아시아의 정세와 한중 관계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인문유대의 개념과 방향,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문유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한중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채택된 배경과 경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이 인문외교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 ‘인문’과 ‘유대’에 대한 한중 양국의 미묘한 시각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견지되어야 할 원칙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인문유대 강화 제안과 합의 배경

인문유대 강화 사업안은 2012년 말 당시 외교통상부가 ‘인문동맹’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처음 거론되었다.⁷⁾ 2013년 1월 인수위원회 사절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5) 예를 들어, <http://goo.gl/VPYS9z>; <http://goo.gl/aHxua5>; <http://goo.gl/qLXnkv>.

6)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권 3호(특집호)의 김경호, 성근제, 싱리취, 장호준, 진재교의 글 참고.

7) <http://news.donga.com/3/all/20130222/53212423/1>

그 기본적인 구상을 중국 측에 내비쳤으며, 중국 측 관련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인문동맹’을 대신하여 ‘인문유대’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으며, 그해 6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하나로 인문유대 강화 사업이 공식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문유대 사업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구상되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미 가치동맹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2년 수교 당시 ‘선린우호 관계’로 시작한 한중 관계는 ‘협력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3)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로 그 수위가 단계적으로 격상되었다.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과 이렇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비동맹국 간 최고 수위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당시 실용외교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상통하는 것이다. 즉, 2008년 4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동맹을 국제관계의 기조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증진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체계를 도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트랙 구상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격상시키고 한국 국제관계의 중심축을 한미 가치동맹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잔여 시기 동안 각종 채널을 통해 한미 가치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과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변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출했으며, 북한 핵문제 해법 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질서 구축 방식과 관련하여 커다란 견해 차이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경색 국면에서 비슷한 시기(각각 2012년 11월과 2012년 12월)에 새로운 통치권자를 확정한 중국과 한국은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위한 모종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게 된 것이다. 즉, 한미 가치동맹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유명 무실한 선언적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교류에서는 질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담보 또는 후퇴를 거듭해왔다는 점이다. 수교 이후,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 연동성이 깊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고대국가의 역사 해석과 영토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이 생겨나는가 하면,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역시 한국에 대한 반감이

8)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한 것은 경제통상 분야로부터 시작된 양국의 협력 범위가 양국간의 주요 사안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고려 하에 글로벌 차원의 협조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국은 경제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넘어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표출되었다. 이렇듯 양국 국민들 간에 역사 및 전통문화 이해와 관련된 갈등이 표면화되고 서로에 대한 집단적 반감이 표출됨에 따라 이 문제가 양국 간의 새로운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갈등 조정을 위한 공개 및 비공개 방식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사 인식 및 문화 원조 논란이 한국에서의 ‘중국 위협론,’ 중국에서의 ‘반한류’와 같은 사회 담론과 겹치면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국내외의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꾸준히 격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심화되어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일례로 2007~201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비율은 2007년 10.1%, 2008년 7.7%, 2009년 6.1%, 2010년 4.2%, 2011년 5.3%, 2012년 5.8%, 2013년 7.8%, 2014년 10.3%로 나타났다.⁹⁾ 또한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주는 나라라는 인식은 지난 2009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았으나, 2011, 2012년에 30%대를 넘어서며 한국인들은 중국을 북한 다음의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했다.¹⁰⁾ 2000년대 들어 공공외교가 중요한 외교전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외교 관계를 무색케 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든 시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12년 말을 전후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 인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현실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한중 관계는 양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반면, 한국은 한중 관계를 한반도 차원에 한정시켜 중국이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양국이 마주하는 테이블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던 셈인데, 단기적 또는 중기적인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가 노정될 때마다 한중 관계에 파열음이 생겼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2년에 동북아 4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통치권자가 교체됨에 따라 동북아 역내에서의 협력체제 재편이 예고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 동안 한중 관계의 심화에 질곡으로 작용해왔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 한중 및 한미 관계의 균형 하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인문 유대와 관련된 제안을 중국 측이 수용한 것은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문 자산의 공공외교 자원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문

9)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은 2013년부터 개선되어 2014년에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대한 해석은 한인택(2015)을 참고.

10)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4년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호감을 표시한 한국인 응답자가 56%로 과반 이상이지만, 동시에 호감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여전히 42%에 달한다(<http://goo.gl/XnVxti>). 이에 대해 한인택(앞의 글)은 한국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수치가 42%에 달하는 것은 의외의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중 양국의 동맹관계 수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와 전통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강한 중국’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문명탐원공정’, 『청사』 편찬 등 각종 역사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유교 윤리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유교적 교양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전교육을 강화해왔다. 또한, 전통문화 연구를 전담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공자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인문올림픽’으로 명명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이러한 역사, 문화적 전통 및 연성 자산을 바탕으로 한 인문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렇듯,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선언은 큰 틀에서 보면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한국의 외교적 필요성과 인문 및 연성 자산을 자양분 삼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해오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는 또한 경제 교류 및 협력이 양국 관계에서 하나의 상수(常數)로 굳어지고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북한 및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맺어진 양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무적인 차원의 구상이기도 하다. 즉, 인문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민 저변으로부터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합의는 인문 자산을 고리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진일보된 공공외교 또는 문화외교의 버전이라 할 수 있다.

3. ‘인문’과 ‘유대’에 관한 다양한 입장

『미래비전공동성명』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은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켜 학술, 지방도시, 청소년, 전통예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사업의 뜻을 올렸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국민 방한을 계기로 양측은 19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중국 시안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문유대 강화사업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2015년 1월에는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50개의 세부사업항목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무부처의 주관 하에 시행 중에 있다.¹¹⁾ 50개 세부사업은 학술교육 분야 10개, 지방간 교류 15개, 청소년 교류 7개, 문화 분야 13개, 기타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한중 청년 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사업,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2차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4개의 중점사업 분야 중 ‘전통예능’이 ‘문화’로 대체되었으며¹²⁾ 4개의 중점 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업항목 선정의 우

11) 외교부 보도자료(2015.01.23.), 『2015년 한·중 인문유대 세부사업 확정·발표』

선순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중점 분야 및 세부 사업항목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¹³⁾ 또한 쌍방적 교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류사업의 이러한 호혜적, 쌍방적 특성을 감안할 때,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이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채워나갈지의 문제는 참신한 교류 아이টে을 발굴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이는 개별 교류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각종 교류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지, 양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위상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으로, 인문유대의 개념 및 관련 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공동성명」 발표 전후부터 최근 2년 동안 인문유대의 개념 및 방향에 관한 여러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인문유대와 인문공동체의 거리

인문유대 강화 사업을 통해 양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류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함께 ‘인문유대(人文紐帶)’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양국이 ‘인문유대’라는 새로운 용어를 외교관계의 핵심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문’과 ‘유대’가 무엇을 지시하고 함축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문교류, 문화외교, 인문외교 등과 같이 인문유대와 유사한 그러나 그 구체적 용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에서,¹⁴⁾ 인문유대의 방향과 원칙,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양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발표를 전후하여 ‘유대’와 ‘인문’의 용법과 관련하여 양국 학계에서 다소 다른 해석이 제기되어 왔는데, 먼저 이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인용한 한 국내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¹⁵⁾ 한국 측이 ‘인문’을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상할 당시 유력하게 거론된 관계 수위는 인문동맹이었으며, 인문연대, 인문공동체, 인문교류 강화 같은 표현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구상 당시에 논의된 적조차 없는 ‘인문유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언론 보도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동맹’은 동맹이라는 단어에 군사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12) 외교부 보도자료(2014.11.20.),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13) 그 예로, 인문교류 사업의 주요 분야인 테마도시사업의 경우 2014년에는 경상북도(경주)와 산시성(陝西省/西安)이,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이난성(海南省)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로 제기된 4대 중점사업 중 ‘전통예능’이 ‘문화’로 대체된 것은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중 문화 교류의 현주소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14) 이희옥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제안한 ‘인문유대’와 중국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문교류’의 개념에는 미세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인문유대’ 용법이 ‘쌍방향’과 ‘국민체감’, ‘신뢰’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인문교류’는 ‘정서’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희옥 2015: 126-27).

15) <http://news.donga.com/3/all/20130222/53212423/1>

테다 한미 가치동맹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문연대’는 제3자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어 ‘연대(連帶)’의 일반적 용례가 지니는 한계 때문에,¹⁶⁾ ‘인문공동체’는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동북아 및 동아시아공동체론¹⁷⁾과의 관련성과 차별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들을 대신하여 한중 양국이 ‘인문유대 강화’라는 표현에 합의한 것은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한 전략적 발상의 소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인문교류’와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인문교류를 활성화”한다고 명시하여 인적, 문화적 교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밝혀 혼란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성격과 ‘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인문유대’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닌 열린 개념으로 남아 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그간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온 백영서(2013)는 한국과 중국 언론에서 보도된 ‘인문동맹’, ‘인문공동체’ 구상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한 바 있다. 한중 인문공동체에 관한 구상이 호혜적이며 균형 잡힌 한미관계를 지향하면서 주변국과 조화로운 다자간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큰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수 있으나 양국이 공유하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인문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대국 논리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논자들은 양국 간 인문교류 강화 움직임을 한중 인문공동체 또는 한중동맹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간주하면서 보다 높은 형식의 틀을 주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중국의 학계와 언론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데,¹⁸⁾ 이는 2013년 4월 24일, 한중 외교부 수장이 베이징에서 가진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이 제안한 인문유대 강화 안건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적극 지지하면서 향후 양국의 우의와 이익 강화를 위해 한중 인문공동체 건립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¹⁹⁾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문유대”가 한중 인문교류의 토대이자 출발점에서 실현될 수 있고, ‘인문공동체’는 양국 인문유대 발전의 장대한 목표 또는 청사진”이라는 싱리취(邢麗菊 2013: 95; 2014)의 주장은 이러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중 인문유대가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찾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회옥 2015:125)나, 최근 AIIB 설립을 전후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싱리취처럼

16) 중국어 ‘연대(連帶)’는 보통 보증(保証), 책임(責任) 등의 단어들과 일차적 호응관계를 이룬다.

17) 참여정부 시기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구상과 함께 2000년대 중반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논의는 지리적 외연이 확장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강조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로 확대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최송화 이사장은 2005년 6월 중국사회과학원과의 공동학술회의에서 문화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중국 학자들에 의해 환영을 받고 동북아 및 한중 인문공동체에 관한 논의로도 진전된 반면(<http://goo.gl/qOKQFD>),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 깔린 대중화유가문화권(大中華儒家文化圈) 구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이정남, 김병국 2010).

18) <http://goo.gl/sVOrFU>, <http://goo.gl/G2jwD8>, <http://goo.gl/rGLbcA> 등이 대표적이다.

19) <http://goo.gl/NCDAlf>.

인문유대를 보다 높은 관계 형태인 한중 인문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인문유대/공동체의 틀에 입각하여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문유대를 둘러싼 미묘한 시각 차이는 단지 관계 형태의 수위, 즉 유대나 공동체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차이는 양국이 서로가 생각하는 ‘인문’이 무엇인지, ‘인문’이라는 열린 개념에 무엇을 채워 넣고자 하는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문유대의 방향이나 교류의 방안도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2) 인문 개념의 다중성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문’교류협력이 합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2013년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8월 25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다. 이 성명에서는 “3.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깊은 *인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심화시켜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이텔릭은 필자). 한글로는 “인적·문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중문으로는 “人文交流”와 “人文紐帶”로, 영문으로는 각각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와 “cultural ties”로 표현하고 있다.²⁰⁾ 이 성명의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문(人文)’은 ‘인적, 문화적’이라는 상당히 느슨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인문’이라는 용어가 외교관계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이 ‘인문유대(人文紐帶)’라는 동일한 용어를 표제어 중의 하나로 채택한 2013년 6월의 「미래비전공동성명」에서도 ‘인문’은 ‘인적, 문화적’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부속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독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도, ‘인적, 문화적’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열려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공동성명과 관련된 일반적 관례와 달리, 2013년 성명에서는 제3의 언어, 즉 영어로 된 번역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 인문유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자, 여러 논자들이 ‘인문’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논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문’은 『주역(周易)』의 구절 “천문을 통해 시절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통해 천하를 교화한다(觀乎天文, 以觀乎天文, 以察時變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는 ‘인문화성(人文化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문’과 대비되는 ‘인문’은 문명, 문화, 인간 삶의 이치로서의 윤리질서 등을 가리키지만, 『사해辭海』의 규정처럼 포괄적으로 ‘인류사회의 각종 문화현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보다 좁게는 문학, 사학,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박재우 2013:15). 그런가 하면, 중화제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지리적 범위를 상정할 때 인문은 유교적 가치체계와 예교 질서(田寅甲 2013:91)를 가리키며,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유교문화와 한자(싱리취 2013, 邢麗菊 2014)를 떠올리기도 한다. 과거 한자문화권에서 인문 개념이 어원과 관

20) 이 성명의 한글, 중문, 영문 본은 『2008 대한민국 외교연표』, pp.236-257을 참조.

계없이 시대마다 다르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목적에 따라 달랐던(진재교 2013:87-88)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닌 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²¹⁾

인문 개념의 이러한 탄력성과 개방성은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 및 문화적 유대의 기반과 관련된 논의에서 양국 논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입장 차이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무엇을 중심으로 인문의 내용을 채우고자 하는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국 논자들은 인문유대의 근거와 핵심 내용을 한중 양국 간 역사적 교류를 통해 공유하게 된 공통의 인문적 자산, 특히 유교와 한자에서 찾고 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정치 및 사회문화체계의 핵심적 원리로 작용하는 유가적 사상체계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2013) 자오후지(趙虎吉) 중공중앙당교 교수는 인문교류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서 ‘한중 유가공동체’ 수립을 제안한 바가 있다고 한다. 최근 한중 관계에 관한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싱리취 역시 중국 “중원문화의 핵심”이자 “아시아의 대표가치인 유교” 문화와 한자(싱리취 2013: 93, 96)를 양국 인문유대의 기반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인문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의 인문적 공유자산을 중심으로 오늘날 양국의 인문교류를 진행시켜나감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유가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문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반면, 상당수의 한국 논자들은 인문유대를 인적, 문화적 유대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통적 인문 자산을 매개로 하는 쌍방향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문교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되며(이희옥 2015:126), 과거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유교와 한자를 포함하여 오늘날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문화적 자산의 교류를 심화시켜 양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류 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공통성 또는 유사성은 과거의 문화적 영향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오늘날 양국 국민들이 지니는 공통의(유사한) 정서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문화적 공통성과 특수성을 기층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방도시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장호준 2013, 김수한 2013),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 항목을 현대문화까지를 포함하여 폭넓은 확대시켜야 한다는 제언(이희옥 2015) 등은 인문유대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인문유대’를 논하면서도 그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논자들 간에 미묘한 차이가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함에 따라 기존의 서구적 가치체계와 표준을 대체하는 중국적 표준을 재정립하고 보편화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1990년대의 국학열(國學熱)과 인문정신 논쟁을 거치면서 중국 지식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난 것인데, 이 과정은 자신의 전통문화와 가치체계를 재발견,

21) 여기에 더해, 서구에서 발전해온 인문/인본/인도/인간주의(humanism)적 전통에서의 인문 개념이나 1990년대 중국의 ‘인문정신 논쟁’ 과정에서 거론된 인문 개념까지를 고려한다면, ‘인문’에 대한 해석이 무척이나 다양한 시각에서 개진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중국적 전통(문화)의 핵심을 차지하며 새로운 이념적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국학(國學)으로 지칭되는 유학 또는 유가사상이다.

유가 사상을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이 비단 지식인 사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후진타오 집권기에 들어 유가 사상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이념적,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되면서 기층 국민들의 일상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인위본(以人爲本)’ 기조에 입각한 유가 사상의 주요 측면들이 새로운 통치 이념인 사회주의 조화(和諧)사회 건설론과 과학적 발전관의 철학적, 사상적 토대로 작용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념적 캠페인에 동원되었다. 중화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중화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치 이념이 일상생활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침윤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교경전 암송대회나 사회주의영웅(榮辱)관 보급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교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와 인문전통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재부각되면서 공공외교 콘텐츠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되어 오고 있다. 공자학원을 앞세워 유가사상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중국적 가치체계를 전세계적으로 보급하며 소프트파워 강화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도 ‘이인위본’과 ‘조화’ 사상과 같은 유교적 가치가 중국 특유의 외교방침이자 실천적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어 오고 있다. 중화제국 시기에 보편적 질서와 가치체계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유교를 한중(또는 동북아) 인문공동체 담론의 중심적 가치로 부각시켜온 일련의 과정이 중국적 표준의 보편화 또는 현대적인 판본의 중화질서 재구축 시도로 우려하는 시각(田寅甲 2013)도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4. 중국의 인문외교와 한중 인문유대

1) 새로운 국제관계 담론으로서의 인문외교

‘인문’은 『주역』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고, 20세기 초반과 1980-90년대의 이른바 인문정신 논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계의 화두로 등장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중국 지식계에서는 친숙한 용어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적, 정책적 담론의 기제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를 “과기, 녹색, 인문올림픽”으로 명명하고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를 특히 ‘인문’올림픽으로 명명한 이유는 동양 문화의 발원지인 중국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여 세계 각 지역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한다는 취지에서였다.²²⁾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22) 第29屆奧林匹克運動會組織委員會(2010:23). ‘인문올림픽’의 ‘인문’은 people’s and cultural, humanistic, humanity, humane, cultural, culture-enriched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지만, 공식적

올림픽 개막식 공연과 같은 화려한 무대를 통해 중국은 문화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인문’올림픽의 성공은 이후 중국이 ‘인문외교’라는 새로운 명칭의 외교전략 하에 중국 특유의 공공외교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방식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이 인적, 문화적 자산을 매개로 한 대외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후진타오 집권 후반기부터이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문교류를 느슨하게 이해한다면, 이는 2000년 러시아와의 교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0년 7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양국이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양국 국민 간에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부문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그해 12월 중러 교문위체협력위원회(中俄教文衛体合作委員會)를 출범시켰으며 2001년 7월 「중러친선우호협력조약(中俄睦鄰友好合作條約)」을 체결하고 이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인위본’에 기초한 ‘조화(和諧)’ 사상이 각종 캠페인의 형태로 중국 전역에 보급되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문’ 담론이 확산되던 2007년 7월, 중러 양국은 기존의 교문위체위원회를 인문협력위원회(中俄人文合作委員會)로 개칭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당시 후진타오 총서기는 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문화의 소프트파워를 강화,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외문화교류를 강화하고 각국의 우수한 문명 성과를 흡수하며 중화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강”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²³⁾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서 언급한 2008년 8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적, 문화적 유대(人文紐帶)”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人文交流)” 심화하자는 항목이 합의, 채택된 것은 이러한 중국 대외관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인문’ 담론을 매개로 한 중국의 대외 전략은 올림픽 직후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양지츠(楊潔篪)의 강연에서 한층 더 체계화된 내용으로 제시된다. 양지츠는 2008년 10월 중공중앙 당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림픽 이후 국제정세와 외교업무(奧運後的國際形勢與外交工作)’에 관한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인문외교’라는 개념을 제출하였다.²⁴⁾ 양지츠 부장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民惟邦本)’이라는 중국의 전통 사상을 언급하며, 사람과 사람, 민중과 민중, 민족과 민족 간의 상호소통과 우호우의를 심화시켜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국제여론이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의 교류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인문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 체육, 관광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과 민간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공자학원과 중국문화센터의 해외진출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의 NGO와 사회 인사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강화시켜 중국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일반 대중들이 기쁘게 듣고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중국의 실제 상황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겠

인 영문 명칭은 people's이다.

23)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07.11)

24) 楊潔篪, 「奧運後的國際形勢與外交工作」(2008.10.20.), <http://goo.gl/jS1QCU>.

다고 역설하였다.²⁵⁾

양지츠의 연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 중국의 인문교류는 중화문화라는 인문적 자산을 매개로 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이자, 인문 담론의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전략으로 읽혀진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문교류는 정부 주도 하에 민과 관이 여러 방면에서 다층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가리키며, 그 영역의 측면에서는 인적 교류와 문화, 예술,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바야흐로 인문외교가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인문교류가 핵심적인 대외교류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인문교류를 통한 중국의 새로운 인문외교 방침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9년에 합의된 미국과의 인문교류사업이다. 2009년 4월 국무위원이자 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류옌둥(劉延東)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인문교류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그 해 11월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중미공동성명(中美聯合聲明)」을 통해 양국 간의 인문교류를 위한 별도의 쌍방향 기제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양국은 2010년 5월 베이징에서 국무위원 류옌둥과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미인문교류고위층협의회(中美人文交流高層磋商會議; China-US High-Level Consultation on People-to-People Exchange)’를 출범시켰다. 이후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및 인적 교류에 대해 협의하며 본격적인 교류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²⁶⁾ 이밖에도 중국은 2012년 4월에 각각 영국 및 유럽연합(EU)과,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프랑스와 인문교류 고위급대화기제를 출범시키고 교육,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연구 인력과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²⁷⁾

이렇듯 중국의 인문교류는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중국적 표준과 가치체계의 존재를 부각하고 확산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외교와 문화외교가 보다 중시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람이 기본(以人爲本)’, ‘백성이 나라의 근본(民惟邦本)’ 등과 같이 인문/인본주의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인문교류는 그러한 구상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담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5)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외교와 인문외교를 분석한 글로는 金正昆·唐妮娜(2009), 董漫遠(2009)을, 인문외교 전략 및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정리한 글로는 楊毅(2012), 趙可金(2011)을 참조할 것.

26) 중미인문교류고위층협의회의 설립 경과와 주요 교류활동 내역은 주미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참고(<http://www.china-embassy.org/chn/zmgx/rwjl/>). 2010년 제1차협의회에서 합의된 중미 양국의 대표적인 인문교류사업은 미국이 향후 4년 내 10만 명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100,000 Strong Initiative; 10万强计划)과 중국 측이 제시한 ‘3개 1만 항목(三个一万项目)’이다. ‘3개의 1만 항목’은 매년 1만 명의 박사과정 유학생을 국비로 미국에 파견하고, 한어경시대회를 통해 미국 학생 1만 명의 중국 연수를 지원하며, 중·미 인문교류 관련 1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이미 미국의 중국 유학생 숫자가 42만 명을 넘었으며, 중국측이 제시한 ‘3개 항목’ 역시 각각 1만 여명을 상회했다고 한다(<http://goo.gl/FrQZN8>).

27) <http://goo.gl/MUa9zw>. 중국이 러시아, 미국, 영국, EU, 한국과의 합의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문 교류 협의 기구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옥(2015:127)의 도표를 참고할 것.

이러한 행보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및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외교적 견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와 함께, 근대 이후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작용해온 서구적 가치체계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표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

2) 중국의 인문외교 전략과 한중 인문유대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중국 특색’으로 이해될 수 있는 중국의 이러한 인문외교 전략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유대의 성격과 방향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인문외교의 틀에서 본다면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 역시 인문외교의 한 형태인 셈이다. 그러나 2013년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한중 인문유대/인문교류는 중미 또는 중-EU 간의 인문교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및 서구권과의 인문교류가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언어, 문화, 사회를 존중하고 배우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중 인문교류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 유사성과 유대감, 공유하는 가치를 전제로 하며 한중 공동의 새로운 가치체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전자가 인적, 문화적 교류의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인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질적 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유대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류 틀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중 인문교류의 이러한 특수성은 중국의 외교 전략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 인문외교의 투-트랙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및 서구 국가들과의 인문교류를 통해서 그 동안 세계의 보편적 가치질서의 위치를 점해온 서구적 문화와 가치체계와 구별되는 동양의 (즉, 중국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존재와 의의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그 것이다. 서구 국가와는 인문적 차이를, 주변국들과는 인문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은 ‘신형대국관계’론과 ‘주변국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최근 중국의 거시적 외교정책 기조와 상통하는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역사적 교류와 친분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2014년 3월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주변국 외교 원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²⁸⁾ 이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대국으로서의 포용력을 지니고 혈연에 가까운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이 최근 베트남, 인도, 몽골 등의 주변국가들과 포럼, 기념사업 등의 형식을 통해 문화적 교류의 폭을 확대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²⁹⁾

28) 주변국들과 혈연에 가까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공통성과 친근감을 실현하고(親), 신뢰를 지키고 속이지 않으며(誠),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가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며(惠), 대국으로서의 넓은 마음과 비범한 기운을 견지해야(容) 한다는 원칙이다(싱리취 2014, 우즈칭 2015).

29) 2013년 6월 중국-베트남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고 문화협정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0월에는 인도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문화협력 협정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8월 시진핑 주석은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문교류를 제안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중·몽 우호 교류의 해 기념 활동을 전개하고, 청년과 매체, 언어, 비(非)물질 문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볼 때, 중국은 서구 국가들과의 인문교류 이외에 주변국들과도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을 고리로 하는 또 다른 축의 인문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중국과 역사-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많다는 사실은 중국의 인문외교 전략에 유리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인문유대 강화 합의 발표를 전후하여 생겨난 한국 내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과 가치체계의 기반을 공유했(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이들 국가 국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거나 공동체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 유대와 공동체의 틀이 오래 전 제국 시기의 교류 자원과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확실히 중원문화의 핵심인 유교와 한자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여전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유대의 문화적 기반을 유교와 한자라는 확실적인 틀을 중심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와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인문유대에 관한 글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싱리쥐 교수는 최근 파키스탄의 한 웹진 포럼에서 「한중인문유대: 유교문화(The humanistic link between China and Korea: Confucian culture)」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중 인문유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³⁰⁾ “과거 중국과 한국 간에 이루어진 역사적 발전과 상호교류에 비추어 볼 때, 두 나라의 문화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중국 전통문화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유교는 한국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교문화의 영향력은 한국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유교(적 이념)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한자는 유교 문화의 중요한 산물이다.” 지면의 반 이상에 걸쳐 유교와 한자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 후, 싱리쥐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중한인문교류공동위원회”의 설치하는 두 나라가 ‘인문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인문교류에서 문화적 지배(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다루든지 간에 친, 성, 혜, 용의 외교적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싱리쥐의 이러한 견해는 한중 인문유대 선언을 전후하여 인문동맹 및 인문공동체에 관하여 일부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회의와 우려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의 전거를 유교나 한자에서 찾고 그러한 인문 자산을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양국 국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싱리쥐의 이러한 견해는 양국 유대의 근거를 과거 중화제국 시기 중원과 한반도의 문화적 영향관계에서 찾고, 인문유대가 지향해야 할 발전적 틀을 유교 및 한자문화권에 입각한 인문공동체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와 한자를 매개로 한중 인문공동체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논의가 한중 인문유대의 틀을 자칫 중화-주변국 관계 또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또는 전근대적 조공질서의 현대화”라는 틀로 환원시킬 수도 있다는 전인갑(田寅甲

유산 보호, 접경 지역 전염병 예방, 사막화 방지 등의 영역에서 양국이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0) Pakistan Defence Forum (2015.01.20.) <http://goo.gl/uafsbb>. Xing은 인문유대를 ‘humanistic link’로 옮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3년 6월 「공동성명」의 영어 판본이 없어, people-to-people, people’s, humanistic, humane과 ties, link, bond 등을 조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다.

2013:90)의 지적은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문을 매개로 한 한중 교류가 유가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지식구조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한중 인문유대 또한 “한국이 중국의 표준 또는 중국식 보편주의를 받아들일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ibid.).

5. 맺는 글 :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을 위한 제언

한중 인문유대는 양국의 공생과 공영발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질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의 원칙하에 제안되고 합의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급속하게 활발해진 경제적, 외교적 협력과 달리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더 소원해진 양국 국민들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합의된 것이기도 하다. 이 정서적 거리는 대북 관계의 해법 차이, 체제 및 이념적 차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외에도, 고대 역사 및 영토 인식의 문제, 전통문화유산의 원조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역사적 교류 경험과 문화적 유사성을 매개로 하여 양국 국민들이 수교 초기에 지녔던 서로에 대한 호감이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한류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 한의학 및 전통 예술에 관한 중주권 논란 등이 그러했듯이, 양국 국민들간의 정서적 공감과 우의(友誼)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문적 요소들이 오히려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선언은 인문의 영역에서 벌어진 양국 국민간의 간극을 인문교류를 통해 좁혀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인문 개념이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탄력성과 인문 담론의 변용 과정에 작동하는 정치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 개념에 내재된 중층적 함의는 한중 인문교류의 바람직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문화적(people-to-people, cultural) 교류를 확대하여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그러한 일체의 교류 활동을 계획, 시행함에 있어서 인문(주의)적(humanistic) 원칙을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다. 인문적 원칙의 요체는 다양한 개체의 특수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통성을 확립적으로 전제하고 각 구성요소들의 차이를 사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함 속에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해나감으로써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요컨대, 같음과 다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인문유대 강화라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공공외교는 서로 공유하는 인문적 자원을 매개로 인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쌍방향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감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교류 및 인문외교가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국제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사업이 의도하지 않았던 역효과를 만들어낼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한중인문유대 강화사업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아 역내에서의 평화와 공존공영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중 인문유대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양국 간의 문화적 공통성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양국 인문 전통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유사성, 더 나아가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후 양국의 사회문화적 변동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원조’ 논란을 야기할 소지도 다분하다. 차이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조로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강릉 단오제와 같은 행사도 중국의 그것과의 같음과 다름, 유사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맹목적인 국수적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양국 국민들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이 비록 한중 양국 간의 문제이고 양국의 필요에 의해 합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제3의 국가를 배제하는,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을 저해하는 형식과 내용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문유대가 제안되고 합의된 시기와 현재의 남북관계, 한일 및 중일 관계를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중 인문유대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현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때만이 국가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호(2013), 「한중 인문교류의 모색과 그 방안」,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1권 4호. pp.74-80
- 김수환(2013),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 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4호. pp.255-277
- 박재우(2013), 「2013년 한중정상회담: 한중 인문교류」, 『정세와 정책』, 2013년 특집호. pp.14-17.
- 성리취(2013), 「한중인문교류의 철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 방안」,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1권 3호. pp.91-96.
- 성리취(2014), 「‘친·성·혜·용’의 문화적 해석」,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2권 4호. pp.58-67
- 우즈청(2015), 「주변외교의 새로운 버전(Version)」,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3권 1호. pp.22-29
- 이정남·김병국(2010), 「중국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pp.165-189
- 이태환(2013), 「2013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정세와 정책』, 2013년 특집호. pp.2-5
- 이희옥(2015), 「한중 인문유대 심화발전의 방안」,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3권 1호. pp.125-132
- 장창창(2013),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통일과 평화』, 제5집 2호. pp.54-73
- 장호준(2013), 「한중 인문적 공감과 지방도시 간 교류」,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1권 3호. pp.84-86
- 장호준(2013),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과 방안」, 『한중 Zine: InChinaBrief』, 제247호. pp.1-12
- 진재교(2013), 「한중인문유대를 위한 단상」,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1권 3호. pp.87-91

충성의(2012), "한중 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 pp.271-300

한인택(2015), 「한국인의 대중인식과 한중동맹 수립 가능성」,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3권 1호. pp.110-116

金正昆·乔旋(2007), 「当代中国外交新理念探析」, 『教学与研究』, 2007年 第3期. pp.87-92

金正昆·唐妮娜(2009), 当代中国外交的新路径: '人文外交'初探, 『教学与研究』, 2009年 第8期. pp.33-38

董漫远(2009), 「推进'软实力'建设,加强人文外交」, 『国际问题研究』, 2009年 第6期. pp.1-8

李亚男(2011), 「论中俄关系发展进程中的人文交流与合作」, 『东北亚论坛』, 2011年 第6期. pp.113-119

李熙玉(2013), 「新的20年: 對韓中關係的新思考」, 『成均中國觀察』, 2013年 第3号. pp.6-14

杨洁篪(2008), 「奥运后的国际形势与外交工作」, 『学习时报』 (2008年 10月 20日)

杨 毅(2012), 「软实力视角下中国人文交流机制的构建」, 『理论与改革』, 2012年 第4期. pp. 110-113

田寅甲(2013), 「韩中'人文纽带'的政治学: 韩国的视角」, 『当代韩国』, 2013年 第3期. pp. 86-97.

赵可金(2011), 「人文外交: 全球化时代的新外交形态」, 『外交评论』, 2011年 第6期. pp. 73-89.

赵虎吉·臧豪杰(2013), 「东西政治价值的冲突与融合: 中韩政治发展比较」, 『武汉大学学报』, 第66卷 第2期. pp.18-26

沈定昌(2014), 「加强中韩人文交流,深化战略合作伙伴关系」, 『当代韩国』, 2014年 第1期. pp.19-23

邢丽菊(2014), 「关于加强中韩人文交流的思考」, 『东北亚论坛』, 2014年 第6期. pp.112-124

第29届奥林匹克运动会组织委员会(2010), 『百年圆梦』(北京2008年奥运会总结报告) 第一卷. 北京: 北京体育大学出版社.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문화적 공통성, 인문공동체, 인문교류, 인문유대, 한중관계
	영문	cultural commonalities, humanistic ties, inmun/renwen,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ties/community, Korea-China relation
<p style="text-align: center;">An Examination of the Discourses and Directions of the Korea-China Initiative for People-to-people and Cultural Ties</p> <p style="text-align: right;">Chang, Ho-Jun</p> <p>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ourses and directions of the Korea-China Initiative for People-to-People and Cultural Ties (PCT) for which the Presidents of Korea and China signed in June 2013. The Initiative has gained public attention because Korea and China, which share cultural commonalities through the long history of mutual exchanges, employed humane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diplomatic policies in an effort to substantiate the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Despite its successful initialization, however, differing views on the PCT have emerged in regards to the notion of cultural ties/communities and the substances of cultural commonalities. This article, based on a review of the political contexts the two countries reached the agreement, critically examines the differing nuance and positions regarding the Initiative.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hinese contexts where traditional cultures, usually represented with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s, are actively employed as political, ideological and diplomatic devices. In addition, examining the Chinese strategies regarding PCT and foreign policies, this article quests for balanced, reciprocal directions of the Initiativ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장호준 / 張豪峻 / Chang, Ho-Jun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hihojun@gmail.com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5월 27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